

[종합·해설]

■ 靑 사과 불구 오늘 '전효숙 인준' 무산될 듯

사상 초유 현재 공백사태 불가피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14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전망이다. 특히 14일 운영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함에 따라 여야의 극적인 타협이 없는 한 다음 국회 본회의 예정일인 오는 19일까지 현재 소장 공석 사태가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1988년 출범한 현재가 수장 공백 사태를 맞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국회에서는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의 유감 표명에 이어 입재정 국회의장의 사과 표명 의사 등이 알려지면서 14일 본회의에서의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지명 철회' 당면 고수와 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야당들의 '여야 합의 처리' 입장이 전해지면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이병완 비서실장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일부 절차적 문제를 충실히 챙기지 못해 국회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국민께도 실례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준안 파동"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입재정 국회의장도 14일 본회의의 개최 시 모두 인사발령을 통해 사과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장경수 당무담당부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당의장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법 조항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그런데 한나라당의 '지명 철회' 당면 고수와 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야당들의 '여야 합의 처리' 입장이 전해지면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이병완 비서실장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일부 절차적 문제를 충실히 챙기지 못해 국회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국민께도 실례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준안 파동"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입재정 국회의장도 14일 본회의의 개최 시 모두 인사발령을 통해 사과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야 3당은 청와대의 유감표명을 긍정 평가하면서 "여야합의에 의한 처리 역시 중재안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14일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처리가 시도될 경우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재정 국회의장은 현 단계에서 14일 본회의에서의 직권상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직권상정된다 하더라도 열린우리당 의원 수가 전체 의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14일 본회의에서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에 캐스팅 보트를 쥐는 민주당

한나라 "靑 유감표명미흡"... '지명 철회' 고수 3野 "여야합의 처리 필요... 단독처리엔 불참"

당이 제시한 중재안 가운데 ▲전효숙 인사청문회의 법사위 회부 ▲대통령 및 국회의장 사과 등 여권이 수용가능한 모든 것을 수용한 셈이라며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유감 표명이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평가절하하고 "원칙적으로 위법인 인사청문 절차를 정상화

하는 방법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 철회 뿐"이라며 기존의 강경 당론을 고수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은 "위헌인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FTA 시한 내년 3월로 생각"

김중훈 한국측 수석대표. 김중훈(사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는 13일 협상 타결 시기 전망과 관련해 "내 만족하는 내년 3월을 시한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국회 통일외무 전체회의에 출석, 한미 FTA 협상 타결 시기를 묻는 무소속 정

문준 의원의 질문에 대해 "내년 6월 말로 끝이 나는 미 행정부의 신속협상권한(TPA)을 감안하면 내년 3월까지는 손에 잡히는 타결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또 열린우리당 최 성 의원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문제가 전서 작전통제권 환수나 6자회담, 대북경제제재 등과 패키지로 연결되면서 뒷거래가 이뤄지고 결국 정부가 국민에

국방위원 회기중 군부대 골프 물의 한나라, 당 윤리위 회부

한나라당은 13일 정기국회 회기 중 평일에 국경감사 피감기관인 군부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 물의를 빚은 김학송 공산정 송영선 의원 등 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을 당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국방위 당 간사인 김학송 의원에 대해서는 간사직 해임을 결정했고, 김 의원은 자신이 맡아온 당 홍보기획본부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 강제성 대표 는 이 사실을 보고 받고 격노했다"며

"김 의원은 도덕적 책임을 진다는 취지에서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강 대표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조치는 이번 일이 7월 경기도당 간부들의 '수해골프' 파문을 계기로 나온 '참정치 운동'이 전개되는 와중에 발생했고,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강력한 징계를 통해 파문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30일 '참정치 윤리강령'을 채택하면서 실천 사례로 '명일 골프 금지', '고급 유흥업소 출입 자제' 등을 적시한 바 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선거법 위반 의원 48명중 34명 의원직 유지 판결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48명 중 34명이 의원직 유지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2006년 6월 현재 국회의원 재판계류 현황'에 따르면 4.15 총선 당선자 중 재판에 회부된 의원은 선거법 위반 48명, 정치자금법 위반 14명, 뇌물수령 50만 원 이하 공금 111명 등 모두 7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두 개 이상의 법 위반으로 중복 기소된 의원은 2명이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선거법 위반의 경우, 48명 중 70.8%인 34명이 벌금 50만~80만원 선고를 받아 의원직 상실을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민기자 man21@

손지열 중앙선관위장 사의 표명

손지열(사진) 중앙선관위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손 선관위원장이 최근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선관위원장을 정무직 삼임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선관위법 개정안이 국

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법 통과 시 새로운 인물이 선관위를 맡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초지자체 '시민감사관제' 도입 외면

광주·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에서 지방교부세 삭감 및 단체장 경조 조치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행정자치부가 민주당 최인기 의원(나주·화순)에 제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민감사관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 5개 구청과 전남지역 22개 시·군 모두가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

들로 시민감사관제를 구성, 연간 9~18차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가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장려 지침으로 하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행정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시민감사관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탁월한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제는 지방자치체도를 더욱 신속하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교부세 삭감 및 단체장에 대한 경고 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공시 최고

아래기재 중의 소지인명 공시최고기일인 2006. 12. 18. 16: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민일 이를 기물이라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중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광주 지방법원 판사 정 회 영

Table with 4 columns: 사건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목적. Lists various court cases and their details.

공시 최고

아래기재 중의 소지인명 공시최고기일인 2006. 12. 18. 16: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민일 이를 기물이라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중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광주 지방법원 판사 정 회 영

Table with 4 columns: 사건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목적. Lists various court cases and their details.

공시 최고

아래기재 중의 소지인명 공시최고기일인 2006. 12. 18. 16: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민일 이를 기물이라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중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광주 지방법원 판사 정 회 영

Table with 4 columns: 사건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목적. Lists various court cases and their details.